

“빛 없는 2차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으로 민생 빅텐트 국가 모든 역량 코로나19로 어려운 분께 가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차 추경행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빛 없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돋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족 변화된 이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민생 압법 바리케이트 철거가 그 시작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건없는 재가동으로 민

생 빅텐트를 세우도록 야당과 대화하자”고 밝혔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은 국체 없이 빛을 안 져도 가능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모든 논의를 임하겠다. 야당도 그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부동산 공급 대책은 6월 임시국회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 한다.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여행업 등 위기업체도 손실지원이 필요하다. 모두 이웃이고 다같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의제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삶의 질 높이는 부동산 법안 등을 제대로 행기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6월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면역 형성 관련해 민주당은 “백신 접종에서도 K-방역 시장이 펼쳐졌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 접종이 시작되자 110일만에 어제 국민 4명 중 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로 빙틀없는 방역 원활한 백신 접종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며 “당정은 오접종, 부작용 등 국민불안 요소를 제거해 안심 접종 신속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 대통령 될 것”

정세균 전 총리, 대권 도전 공식화… “혁신경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약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한 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다.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경제를 지휘하고 멀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으로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까지 우린 이미 세계의 중심”이라며 “이제 그 힘을 새롭게 조직해 ‘돌로우 코리아 블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소득은 20위 안에도 못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들고 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

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처를 제안한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해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여력으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낭패 단가 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층과 관련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봉장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잔치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줘야 한다”며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임기 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고,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도의회 예결특위,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진행 중’

청사 접근성 제고 측면 검토·이월예산 효율적 운영 개선 주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결산심사 2일 차인 17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자금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미수납액의 징수노력과, 세출사업별 불용예상액은 연도말 추경 등에

감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

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코로나19 관련 청사출입시스템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사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후 도민들의 청사 접근성 제고 측면

검토를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명시이월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로 예산액 전액이 불용됐는데, 현액으로 관리되는 명시이월된 예산이 사업되

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기했다.

김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의

명시이월 내역을 질문하면서, 본사업

을 김제위주가 아닌 농촌지역 인구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확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고이월된 전라

유학진흥원 건립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연도별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분야 결산내역을 살펴며, 미수납액 사업 중 재산원대수입 미수납액을 1년도 이월처리로 된 사유를 확인하는 등 재원별로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판단해 세입누락이 없도록 하고, 예산현액과 수입액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 등 미수납된 내역을 확인하며,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복지·성평등 기금 조성액 확대, 적절한 기용 방안 마련을”

박용근 도의원 “조성액 대비 2% 내외 활용 불과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활용돼야”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 도의원이 17일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복지·성보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 및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확대 및 적절한 기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말 기준 성평등기

금의 조성액은 약 33억5,000만원, 노인

복지기금의 조성액은 약 21억원에 달

한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각 기금의

지출액은 각각 전체 대비 약 2% 내외

인 4,100만원과 4,300만원에 불과해 적

절한 기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강타

한 이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새로

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일

상생활 회복을 위해서는 여가 중심이

아닌 더욱 다양한 범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정책 환경 또한 급속도

로 변화하고 있고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민적 공분이 일

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

련 단체 4개(전북여성안전지원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가족복지문화

원, 군산여성의전화) 지원 사업을 확

대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기금

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 규

모를 식품전용기금 등과 같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며 “도민 보호의 관점에서 기금 성과

의 극대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일

상생활 회복을 위해서는 여가 중심이

아닌 더욱 다양한 범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정책 환경 또한 급속도

로 변화하고 있고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민적 공분이 일

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

련 단체 4개(전북여성안전지원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가족복지문화

원, 군산여성의전화) 지원 사업을 확

대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기금

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 규

모를 식품전용기금 등과 같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며 “도민 보호의 관점에서 기금 성과

의 극대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 대도약의 기회로”

우범기 정무부지사 부안 찾아

주요 현안 관련 현장행정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무부지사는 경포항과 청진항을 찾았으며, 청진항은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무부지사는 경포항과 청진항을 찾았으며, 청진항은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우 부지사가 둘러본 활동도 인근 해역은 무